

4월 첫째 주 정세동향

2010년 4월 1일 목요일

02 세계경제	<p>세계적인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의 최근 동향 및 평가(3/7, 한국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중인 금융규제방안의 특징 - 주요 내용 - 전망
05 세계정세	<p>미국 건강보험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안 추진경과(3/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절반의 성공, 미완의 완성: 오바마 건보개혁과 시사점(3/29, 코리아연구원) - 미 건강보험개혁안은 사적보험회사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3/24, Links) <p>태국, '붉은 셔츠' 투쟁</p> <p>국제분쟁지역 리포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10 한국경제	<p>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어떠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한국 재정건전성 양호 평가(3/26, 기획재정부) - 한국의 국가채무는 실제 얼마일까(3/15, 오건호) <p>태국, '붉은 셔츠' 투쟁</p> <p>국제분쟁지역 리포트</p>
13 한국정세	<p>천안함 사고</p> <p>지자체 선거</p>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반도체 백혈병 박지연씨 사망, 삼성반도체 여전히 산재 거부 - 무상급식 예산, 또다시 전액 삭감...
14 노동	<p>총연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 6.2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 선거 대응 <p>금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정규 연대투쟁 -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 금속노조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사수 총력투쟁' 현장조직화 <p>공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노조 단협해지 <p>철도/화물/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노조 징계현황 -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 소속 4개 노조 탈퇴 - 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동양광주분회 크레인 고공농성 <p>교사/공무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노조 탄압 -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파업안 가결

- 대법원,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국가고용전략회의

20 여성

특이사항 없음

■ 세계경제

1. 세계적인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의 최근 동향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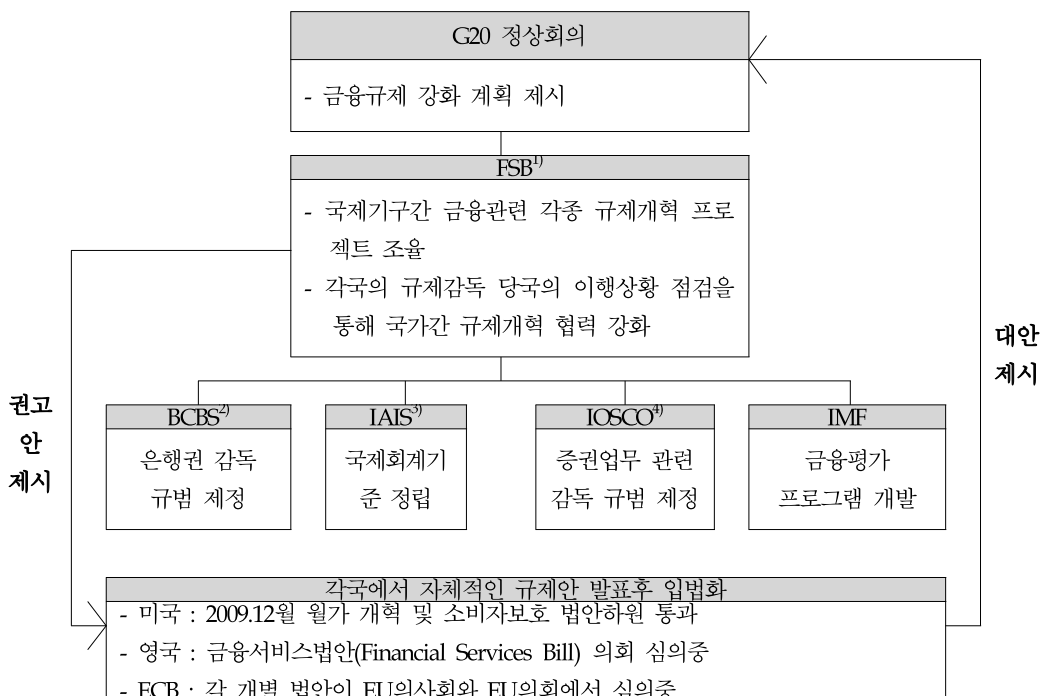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제2010-11호 / 2010. 3. 7~3. 13)

- 미국과 영국은 다양한 금융법안을 포괄하는 일괄법안(package)을 발표해 의회에서 논의 중인 반면 EU는 주제별로 독립적인 규제안을 만들어 논의 중. 미국은 2009년 12월 하원에서 다양한 규제안을 총괄한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 법안을 의결하였으며, 2010년 1월 행정부에 의해 제안된 금융위기책임세와 Volker Rule은 상원안에 포함되어 논의될 예정. EU는 개별 규제안이 독립적인 법안으로 작성되어 EU 위원회 및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대부분 법안을 금년에 시행할 계획.

1) 논의 중인 금융규제방안의 특징

① 금융규제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 과거의 금융규제가 주로 한 국가내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국제기구와 각국간 협력체를 중심으로 규제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공조체제가 강화.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금융시장 개혁의 기본 방향이 제시된 후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조율 하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국제기구가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마련. 각국은 국제적인 규제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자체적인 금융규제안을 마련하고 입법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은 각종 국제협의체의 의제에 반영되는 등 피드백 체제를 형성. 최근 미국에서 제시된 금융위기책임세, 대형금융회사의 업무 및 규모 제한(Volker Rule) 등 새로운 규제안이 G20회의에서 논의.

국제적인 금융규제 강화안 수립 체계



- 주 : 1) 금융안정위원회(Finacial Stability Board)
 2)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3) 국제보험감독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4)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② 규제대상의 다양화: 과거의 금융규제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 금융감독기구 설립 및 재편, 금리 규제 등 주로 은행증권의 기본업무를 대상으로 함. 그러나 최근에는 새롭게 등장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와 파생금융시장 등이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신용평가제도, 금융회사 보수체계, 부실금융회사 정리체계 등도 논의의 대상. 또한 미시적 금융감독 뿐 아니라 거시금융감독체계라는 새로운 개념도 활발히 논의 중.

③ 금융회사 영업의 엄격한 분리에는 신중한 입장: 글래스 스티걸 법 제정 당시와 같이 지금도 투자은행업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편. 그러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는 과거 방식으로 회귀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 Volker Rule에서도 (자기계정거래, 헤지펀드 및 사모주식펀드 투자 등) 일부 투자은행업무를 금지하고 있으나 은행의 증권 인수 및 시장조성거래(market making, 증권선물 시장 등에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제시하고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등의 업무는 여전히 허용.

2) 주요 내용

① 거시건전성 감독의 제도화: 기존의 미시건전성 위주 감독이 경제의 거품생성과 붕괴를 오히려 촉진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이 부각. 미시건전성 위주의 감독체계에서는 경기 상승시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져 리스크를 간과하는 한편 거품붕괴시에는 유동성확보를 위한 금융회사 보유자산의 조기매각을 유도해 시스템 리스크가 더욱 확대. 지금까지 거시건전성 감독은 감독당국의 재량에 맡겨졌으나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감독방식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 즉 호황기에는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불황기에는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전성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 장기성부채에 기초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평가적용을 완화해 불황기에 급격한 자산매각을 방지. 실제로 각국은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감독기구를 일부 개편하고 있는 중. 미국의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FSOC) 신설, 영란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권한 강화, EU의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C) 신설 등.

② 자본금에 대한 양적·질적 규제 강화: BIS 자기자본 비율이 양호한 금융회사가 금융위기로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BIS 비율 산정시 자기자본과 위험가중자산의 정의 및 산출기준에 대한 논란이 야기. BCBS는 자본의 질과 양을 개선하고 자본공편만 아니라 유동성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등 기존 BIS 자기자본규제 체계를 보완. (기본자본(Tier I)의 핵심형태를 보통주 중심으로 구성하고 현 BIS비율 8%와 같은 단일 기준을 총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핵심자본비율 등 3개 기준으로 확대하여 자본의 양과 질을 강화.) 또한 감독기관이 활용할 유동성관리 평가기준으로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위기상황 하에서 30일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측정), 순안정자금조달 비율(장기적·고정적인 대출과 투자(자산운용)가 안정적인 자금조달(부채·자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 측정) 등을 제시.

③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초래할 시스템리스크의 방지가 주요한 과제로 부상. 이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B; Systemically Important Bank)를 미리 정해놓고 동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 이들 회사에 특별히 높은 수준의 밀착 규제감독을 실시하고 위기가 아닌 정상적인 영업기간에도 주기적으로 자체적인 도산계획(living will)을 제출받아 파산위험시에 신속하게 정리. 구제금융 재원은 대형 금융회사가 사전에 펀드를 조성하거나 사후에 이들 금융회사에 대해 세금을 부과(미국 금융위기책임세, 글로벌 금융거래세 등)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④ 장외파생금융시장과 유사은행업 등 규제대상의 확대: 장외파생금융시장과 헤지펀드, 투자은행 등 유사은행업의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증대. 유사은행업은 단기차입금으로 장기자산에 투자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 뱅크런에 취약하며 위기시 시스템리스크로 옮겨가기 쉬운 특성을 보유. 30년 만기 모기지대출 관련 MBS를 담보로 3개월물 단기

증권권을 발행할 경우 30년간 3개월마다 단기증권 발행에 성공해야 유동성 위기 회피가 가능.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시장의 효율성 저해를 이유로 규제에는 미온적.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및 결제 절차를 표준화하고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의 레버리지를 직접 규제. 즉 모든 장외파생상품을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에서 거래토록 하고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상품구조가 표준화되지 못한 비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보저장소에 정보 보고). 또한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 금융회사의 레버리지에 대해 은행업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

⑤ 금융감독의 국제공조 강화: 국경을 초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영업하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 국가별 은행감독기관을 중심으로 공동감시단을 구성해 국제적인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공동 감시. 현재 30개 다국적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감시단 내 정보공유 원활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중.

공동감시 대상 금융회사 (2010. 3월 현재)

미국(6)	Goldman Sachs, JP Morgan, Morgan Stanley, BoA, Merrill Lynch, Citibank
캐나다(1)	Royal Bank of Canada
일본(4)	Mizuho, Sumitomo Mitsui, Mitsubishi UFJ, Nomura
독일(2)	Deutsche Bank, Allianz,
프랑스(3)	BNP Paribas, Societe Generale, AXA,
영국(4)	HSBC, Royal Bank of Scotland, Standard Chartered, Aviva
스위스(4)	UBS, Credit Suisse, Swiss Re, Zurich Financial Services
스페인(2)	Banco Santander, BBVA
이탈리아(2)	UniCredit, Banca Intesa
네델란드(2)	ING, Aegon

주: ()안은 개수

⑥ 보수체계 등 금융시장 하부구조 보완: 기존 금융회사 종사자의 보수체계, 신용평가제도 등 금융시장 하부구조가 직접적으로 금융위기를 증폭시켰다는 평가에 따라 보완 필요성이 대두. 손실에 대한 책임부과는 없고 수익에만 비례하는 금융회사의 비대칭적인 보수체제로 단기 고수익을 위한 무분별한 투자가 증가. 신용평가회사의 잘못된 평가로 리스크 판단의 오류가 발생. 따라서 성과급 인센티브 구조를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금융권 성과급에 대한 과세 강화, 규제금융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 제한 등을 실시. 신용평가회사가 컨설팅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용평가를 금지하고 신용등급을 제시할 때 해당기업의 과거 컨설팅 업무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3) 전망

① 금융규제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

- 금융규제 강화방안이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던 2008~09년 은행업계는 막대한 로비자금을 투입하여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 미 책임정치센터(CRP)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도 미 헤지펀드 업계는 2003~06년 평균치(90만 달러)의 7배에 달하는 로비자금(610만 달러)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미국 10대 은행은 2008년보다 6% 가량 증가한 2천6백만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

- 최근 미국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에서 단독법안처리가 가능한 절대다수의석을 상실한 데다 민주당내에 월가를 지지하는 신민주당연합(New Democrats Coalition) 세력이 자리잡고(민주당 의석중 27% 차지)있어 금융업계의 압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

- 또한 각국의 금융규제 강화방안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대중의 관심이 저하될 가능성.

② 핵심사안에 대해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최종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전망

- 규제반대론자들은 규제비용이 시장에 전가되면서 금융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고 향후 출구전략 시행시기와 맞물려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비판. 파생상품시장 규제에 따른 비용증가로 금융서비스 가격이 높아지며 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증가. 금융위기 책임제로 얻을 수 있는 미 정부의 연간 예상수입은 1,000억달러 가량이나

금리가 9bp만 상승해도 정부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이 수입을 상쇄하며 규제효과도 무색해진다고 주장(2009년말 미국채 발행 잔액 12.3조달러 × 9bp = 1,100억달러).

- Volker Rule 등 대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안은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 대규모 금융회사일수록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 리스크 흡수 능력이 높다고 주장. 1980년대 S&L 위기가 소규모의 부실한 금융회사로 인해 발생한 점, 최근 위기도 대부분 소형회사의 파산에 기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융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파산위험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불확실하다는 입장. (2007~09년 도산한 146개 은행중 자산규모가 10억달러 미만인 은행이 117개로 80%이며 향후에도 은행파산은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중소은행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

- 또한 일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규제 강화방안을 과잉규제로 인식하는 국가와의 규제차익으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의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

③ 국가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공조체제에 분열 조짐

- 현재 규제의 세부사항에 대해 미국, 영국 및 유럽국가들은 비교적 큰 견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Volker Rule의 경우 은행을 중심으로 증권업 겸업관행이 오래전부터 정착되어온 유럽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상황. 헤지펀드, 장외파생금융시장의 경우 시장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영국이 일부 대상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고 있어 유럽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금년 3월 EU의 헤지펀드 및 파생상품시장 규제 등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 미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3.1일 EU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규제안이 미국과 유럽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항의 서한을 EU에 전달. 3.10일 Turner 영국 금융감독청장은 CDS에 대한 투기거래 규제를 강화하려는 EU의 움직임에 대해 성급한 대응이라고 비판. 일부에서는 EU가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데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우위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독일과 프랑스의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을 제기.

■ 세계정세

1. 미국 건강보험개혁

1)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안 추진경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3.30, 지역경제포커스 10-11호)

① 집권 후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 구상

-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부가 공공보험을 갖추어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음.
- 민간보험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보험과 경쟁하며 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함.
- 가입자의 혜택 확대를 위해 민간보험사에 보조금을 지급, 보험사사 질병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
-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안의 핵심은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및 건강보험거래도 설립을 통해 신규 공공 또는 민간 보험 상품의 선택 폭을 확대하여 미 국민의 보험 가입 용이성을 증대하는 것임.

② 상/하원 건강보험개혁법안의 주요 내용과 조율 과정

- 오바마 행정부 건강보험개혁 구상에 입각해 상정된 하원의 건강보험개혁법안은 2009년 11월 7일에 통과. 하원 법안은 전국 단위의 '정부 관장 공공보험 옵션' 을 도입하고 그 동안 민영보험사가 독점해왔던 미국 건강보험 시장에 2013년부터 공적 건강보험사가 참가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 건전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 또 기존 병력 및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회사의 피보험자 차별 금지, 피고용인에게 건강보험 서비스 의무제공 위반 시 1500달러 벌금을 부과하기로 함.

- 상원은 건강보험개혁법안을 2009년 12월 24일에 통과시킴. 하원법안과의 차이점은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공공보험 옵션’ 신설 방안이 상원안 심의과정에서 필러버스터 저지를 위한 타협의 산물로 삭제된 것.
-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상원법안의 원안과 상원법안 원안에 반대하는 하원의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 법안을 동시에 가결하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

③ 조정건강보험개혁법안의 주요내용

- 하원은 상원에서 재이송된 조정건강보험개혁법안을 3/25일 통과시킴. 이로써 건강보험개혁이 종료됨.
-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9380억 달러를 투입하여 무보험자 5400만 명 중 3200만 명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함.
- 65세 미만이며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3%(4인 가족 기준 29,327달러)인 모든 개인에게까지 메디케이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부모의 건강보험에 편입될 수 있는 자녀연령제한을 26세로 상향 조정.
- 보험사에 개인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인한 보험가입 거부를 금지, 개인 또는 단체가 개별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거래시스템을 도입,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포함.
- 27,500달러 이상의 고가 보험 상품에 가입한 가족에게 2018년 이후 새로운 소비세 40%를 부과,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게 2013년 3.8%의 신규 과세 도입 예정.

④ 전망

-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안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노인 의료보험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11월 중간 선거 시 동법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밝힘.
-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부담 가중에 대한 거부감. 동 개혁이 의료서비스 질의 하향평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의료비 지출 감소와 서비스 개선을 희망하는 중산층도 개혁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신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전망으로 인해 적극적 지지를 유보하고 잇는 상황.
- 오는 11월 미의회 중간선거가 오바마 행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건강보험개혁은 상하원 통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
-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타 주요 정책이 추진될 기반이 마련됨; 금융개혁법안, 에너지법안, 이민개혁법안, 대외통상정책 등.

2) 절반의 성공, 미완의 완성: 오바마 건보개혁과 시사점

(양재진, 2010.3.29.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109호)

- 오바마의 건보개혁을 환영하면서도, 환호하지는 못한다. 오바마의 정치력과 리더십이 빛났지만, 그만큼 아쉬움이 크기 때문이다. 오바마 건보개혁의 최대 이슈는 public option(공적의료보험)의 도입여부였다. 그런데, 이 계획은 공화당과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집요한 반대로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민간의료보험회사들에게 최대 6,000만 명에 달하는 잠재 고객만을 안겨준 채, 이번 오바마 건보개혁은 끝을 맺고 만 것이다. 물론 의미 있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애초 의도대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하지만, 의료비 통제와 효율화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대부분의 미국 국민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업자나 직업이 불안정한 저소득자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9,327 미만)의 경우 의료부조제도인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 둘째, public option은 좌절되었지만, 민간의료보험의 공적책임성 강화와 효율성제고를 위해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모든 민간보험회사는 과거 병력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고, 노인의료보험료가 젊은이의 3배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주어졌다.
- 셋째, 이번 건보개혁은 100% 세금으로 지원되는 메디케이드의 확대적용과 신규 민간의료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9400억 (한화 약 100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 복지국가 역사에 일대 획을 그은 업적을 이루었다. 하지만, public option안이 좌절된 이번 건보개혁은 절반의 성공으로 그 의

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 이렇듯 반쪽 개혁에 머무른 미국의 건보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 우리의 공적 의료보험체제인 건강보험제도를 확고한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내실있는 건강보험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3) 미 건강보험개혁안은 사적보험회사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Billy Wharton, 2010.3.24, Link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ist Renewal)

- 미 건강보험개혁은 너무나 절실해서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건보개혁을 지지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법안은 사적 보험회사들의 이익만 불러주는 안이다.
- 민주당은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렸다. 그들은 공공보험안을 삭제한 공화당의 개혁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로 사적보험회사와 제약회사들은 의회에 엄청난 로비를 했다.
- 이번에 통과된 건강보험개혁안으로 인해 시민들은 건강보험에 강제로 들어야 하고 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휴마나, 옥스퍼드, 에트나 등 거대 보험회사에 2천만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줄 것이다.
-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미국 보험회사들의 비도덕적인 영업은 한 해 4만 명 이상의, 치료 가능한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제 이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법에 따라 형편없는 건강보험의 판매를 위해 세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 건강보험회사들은 지난해 상반기동안 하루에 평균 60만 달러를 로비에 할애했다. 1990년대부터 로비스트들은 줄곧 건강보험 개혁을 저지하거나 ‘나쁜 개혁’ 을 유도하는 전략을 써왔다.

2. 태국, ‘붉은 셔츠’ 투쟁

1) ‘혈액 시위’ 까지 벌인 타이 ‘붉은 셔츠’ , 왜 저항하나

(박은홍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2010.3.31. 참여연대, 프레시안)

- 1992년 5월 시민항쟁을 계기로 1997년 헌법이 제정되고 이것이 시민사회의 의사를 수렴했다고 하여 ‘국민헌법’ 으로 불렸다. ‘97년 체제’ 하에 타이 최초의 정책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탁신의 타이애국당이 집권.
- 친서민 정책을 펼 탁신의 포퓰리즘은 타이애국당이 민주헌정 최초로 연립없이 단독 집권을 가능하게 했고, 동시에 ‘다수의 횡포’ 에 따른 배제의 정치가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사해로 이어짐. 이에 일부 시민사회진영은 존왕주의자들과 연합하여 탁신 퇴진운동에 나섬.
- 2006년 9월 19일 쿠데타의 주역들은 탁신 수상의 부패와 분열주의 정치, 헌법상 보장된 독립기관에 대한 침해, 군주제에 대한 위협을 들어 쿠데타를 정당화. ‘입헌군주제하의 민주개혁평의회’ 는 1997년 헌법을 폐기하고 임시헌법 공포, 시행하고 전 육군총사령관 수라웃 출라는 추밀원 의원이 과도 수상으로 취임.
- 군부에 의해 수상이 된 수라웃 장군은 국왕이 제시한 ‘자족경제’ 를 기조로 함. 이는 기업가 정신의 제고를 강조하는 탁신의 경제정책과 대조.
- 탁신정부의 와해를 바랬던 중산층들은 군부와 보수적 존왕주의자들 지지. 이들은 탁신을 지지하는 빈민, 농민들이 아직 민주주의적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한, 포퓰리즘에 현혹된 집단으로 보며 탁신을 부패한 독재자, 교활한 포퓰리스트로 봄 (지식인, 중산층 중심의 ‘노란 셔츠’). 반탁신운동을 이끌었던 보수주의자들은 탁신퇴진운동을 ‘남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그 대가로 탁신을 지지하고 있는 빈민들과의 계급전쟁’ 이라고 봄. 이로 인해 왕실은 외견적으로 전례 없이 강력해지고 왕실과 군의 관계가 돈독해짐.
- 국왕이 2006년 9월 쿠데타를 승인하자 인터넷에 국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 정부 당국은 이들에게 최고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왕실모독죄를 적용. 그럼에도 왕실을 비난하는 인터넷 사이트 증가. 정부 당국은 이들 사이트 폐쇄. 탁신 지지세력인 ‘붉은 셔츠’ 는 현재 정국혼란의 원인을 2006년 9월 쿠데타로 보며 1997년 헌법의 복원을 주장

함.

2) ‘붉은 셔츠 대화’ 는 군부 권력의 징후

(Joshua Kurlantzick, 2010.3.29,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지난 주 태국 아비시트 수상은 전 수상 탁신의 지지자들인 ‘붉은 셔츠’ 의 시위에 들인 기존의 입장을 바꿔 ‘붉은 셔츠’ 와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비시트는 전에 그들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붉은 셔츠는 당장 의회를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새로운 선거를 통해 그들이 지지하는 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떤 언론들은 이 대화가 폭탄, 수류탄 테러 등 최근 태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그러나 이 대화는 보다 불길한 징조를 나타낸다. 방콕의 영자지 The Nation지는 이 협상이 ‘붉은 셔츠’ 시위대가 방콕에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행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프라비트 왕수완 국방부장관과 아누퐁 파오친다 육군 참모총장이 아비시트에게 그가 ‘붉은 셔츠’ 와 대화를 개시하지 않으면 군은 아비시트 정부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경고했다” 고 방콕의 전문가는 전한다.
- 즉 아비시트가 시위대와 대화하지 않으면 군은 아비시트의 반대파와 연합하고 아비시트 정부에 대한 군사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결코 진전이 아니다. 아비시트가 위기를 해결한다면 그것은 사실 군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인 것이다. 이런 경우 태국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누렸던 민주주의를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 참고자료

붉은 셔츠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

(자이 자일스 옹파콘(타이 좌파 활동가), 2009.4.25, 레프트 21, 4호.)

- 타이 군대가 방콕의 민주화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타이 역사에서 군대는 민주화 시위대를 향해 네 번 발포했다. 매번 발포의 목적은 똑같았다. 지난 70년 동안 타이를 통치해 온 보수 엘리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 현재 위기는 2005년 말부터 타이에서 빈민과 엘리트 간 계급투쟁이 격화한 결과다. 타이 좌파의 공백 때문에 탁신 시나 왓 같은 부유한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빈민의 지도자 구실을 할 수 있었다. 타이 유권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시와 농촌의 빈민이 ‘붉은 셔츠’ 를 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그동안 당연시돼 온 군 장성과 왕실의 ‘조용한 독재’ 의 종식을 뜻한다.
- ‘조용한 독재’ 에서 군 장성, 왕의 보좌관, 보수적 엘리트 들은 초헌법적 존재로 군림해 왔다. 그들은 국왕모독죄 등의 수단을 사용해 저항세력을 억눌렀다. 그들은 2006년부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탁신 정당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노란 셔츠’ 폭도들의 거리 난동을 지원했다.
- 붉은 셔츠가 탁신을 지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탁신 정부는 최초의 국민의료 제도를 포함해 많은 현대적 빈민 구제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붉은 셔츠는 탁신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붉은 셔츠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탄생한 조직들로 구성돼 있고, 그 중 일부는 국왕에 ‘충성’ 하라고 요구하는 탁신의 지도가 진보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지난 며칠 간 붉은 셔츠의 행동에서 자발적 측면마저 나타났고, 붉은 셔츠의 탁신계 정치인들은 이를 따라잡기에 급급했다.
- 또, 붉은 셔츠 운동의 공화주의적 성격이 강화하고 있다. 나를 포함해 많은 좌파 지향적 타이인은 탁신 지지자가 아니다. 우리는 탁신의 인권 유린 정책에 반대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 를 추구하는 붉은 셔츠 운동과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좌파 경향을 구성하려 한다.
- 노란 셔츠는 보수적 왕당파 집단이다. 그들은 2006년에 군부 쿠데타를 지지했고, 지난해 정부 청사를 약탈하고 국제 공항을 봉쇄했다. 군부가 그들의 뒤를 봐 주고 있다. 군대는 노란 셔츠에 발포한 적이 없다. 영국 사립고등학교와 옥스퍼드를 졸업한 민주당 총리도 노란 셔츠를 가만 놔뒀고, 노란 셔츠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 노란 셔츠의 목적은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제약해 보수적 엘리트들이 ‘옛날 옛적 방식으로’ 타이를 지배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다. 시민권 향상에 위협을 느낀 노란 셔츠는 “신질서” 독재를 대안으로 내세우는데, 이 체제에서 사람들은 투표권을 갖지만 국회의원과 공직 대부분은 선거와 상관없이 임명될 것이다. 타이 주류 언론, 대다수 중간계급 학자, 심지어 NGO 지도자들도 이것을 지지한다.

- 타이 '왕실' 을 말할 때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을 구분해야 한다. 타이 왕의 권력은 언제나 미약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왕실의 권위는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다. 이른바 '안정세력' 으로 꼽히는 왕실은 사실 엘리트들의 이익을 안정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굴지의 부자인 왕은 부의 재분배에 반대한다. 왕비는 놀라우리만치 반동적이다. 그러나 타이 엘리트의 실세는 언제나 군부와 고위 관료들이었다.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1. 아프가니스탄

1) 탈레반검거 평화회담에 부정적

2월 16일 파키스탄 정보국은 탈레반 2인자인 압둘 가니 바라다르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 검거함. 바라다르는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사이 평화협상에서 창구역할을 했음. 탈레반과 아프간의 협상에서 파키스탄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검거에 나섰다. 일각의 추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임. 아프간 대통령궁 부대변인은 탈레반 지도자 검거가 아프간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음. 특히 최근의 고위층 검거는 평화 중재 계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 또한 최근 임기를 마친 전 주아프간 유엔대표는 BBC와 인터뷰에서 파키스탄 당국의 탈레반 지도부 검거가 유엔과 탈레반의 비밀 접촉선을 완전히 차단했다며 강력하게 비난.

2) 카르자이 정부 무장세력과 평화협상

3월 22일,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헤즈비 이슬라미의 고위급 대표단과 첫 대면협상을 벌임. 탈레반과도 비공식 접촉을 가져왔으나 최근 바라다르 등의 검거로 순탄치 못한 상황으로 추측. 그러나 탈레반과 동맹관계인 무장세력과 협상을 가졌으므로 탈레반과의 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헤즈비 이슬라미는 1996년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기 직전 총리를 지낸 군벌 굴부딘 헤크마티아르가 이끄는 무장세력으로 탈레반과는 기득권 유지 차원의 동맹관계. 헤크마티아르는 1980년대 아프간 점령 소련군과의 투쟁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았으나 소련군 철수 이후 내전 과정에서 미국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으며, 2003년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랐음.

헤즈비 이슬라미 측은 연합군의 모든 군사작전 중단, 올 하반기 중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내년 초 과도정부 수립 및 총선 실시 등 15개항의 '평화 계획' 을 제시했다고 보도됨. 일부에선 헤즈비 이슬라미가 아프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권력분점을 노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탈레반과의 동맹이 깨질 수 있다는 관측. 실제로 이달 초 아프간 북부 바글란 지역에서 두 조직이 무장충돌하면서, 헤즈비 이슬라미 무장대원 상당수가 정부군에 합류.

3) 오바마 아프가니스탄 방문

오바마 대통령은 카르자이와의 회담에서 아프간 정부의 부패 척결과 통치권 확보를 강하게 요구. 최근 파키스탄 이란 중국 지도자들과 잇따라 회동한 카르자이 대통령에게 경고와 함께 아프간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력 없이는 아프간전의 성공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

4) 6월 칸다하르 대공격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이 칸다하르 대공세를 오는 6월에 개시. 나토군은 이슬람 금식기간 라마단이 시작되는 8월 전에 칸다하르를 함락한다는 목표. 이미 탈레반 최대 근거지인 남부 마르자를 장악한 상황에서 칸다하르까지 함락할 경우 탈레반이 아프간 남부의 거점을 모두 잃게 돼 전쟁의 주도권을 상실할 것으로 나토군은 판단. 이에 따라 2개월간의 칸다하르 대공세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새 아프간 전략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 나토군은 이미 지난해부터 칸다하르 주위에 병력을 증강해 왔고 올해 추가로 파병되는 병력 가운데 상당수를 칸다하르 작전에 투입할 것. 이 경우 칸다하르 작전 규모는 1만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 마르자 작전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

2. 이라크

1) 말리키 총리 주도 집권당 패배

지난 7일 총선 결과 시아파인 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정당연맹체 '법치국가연합' 총 325석 중 89석, 91석을 확보한 시아-수니 정당연맹체 '이라키야'에 이어 2위를 기록. 지난해 1월 지방선거에서 14개 주 가운데 9개 주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하며 압승했던 법치국가연합은 불과 1년여 만에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는 제2당으로 전락. 말리키 총리는 이라크전 이후 극도로 악화됐던 치안을 안정시켰다는 평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하반기 3차례에 걸쳐 발생한 바그다드 정부청사 폭탄공격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상실. 또 후세인 정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니파 정치인 400여명의 총선 출마를 가로막은 조치도 시아-수니 종파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 역행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

-종파간 갈등 해소에 대한 이라크 국민의 염원이 반영

한편 시아파 국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이라크에서 수니파와 힘을 합친 정당연맹체가 다수당에 오른 것은 이번. 이라키야의 돌풍은 시아-수니 종파간 갈등 해소에 대한 이라크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 이라키야의 승리는 수니파의 정치적 지분이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며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시아파가 장악하고 있던 이라크 정치 구도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올 것 이란 전망.

-반미 강경파 약진

반미 강경파 사드르 정파는 325명의 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40명가량을 당선. 사드르 정파는 이라크 전쟁 후 계속되는 혼란과 빈곤에 고통스러워하는 저소득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선전.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마흐디 민병대를 앞세워 반미를 기치로 무장투쟁에 주력해 왔지만, 힘의 열세를 실감하고 2008년 휴전을 선언한 뒤 제도권 내 정치투쟁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옴. 총선에 불과 52명을 후보로 낸 상황에서 40명에 가까운 당선인을 배출한 점은 확고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

-향후 전망

이라키야 325석 중 91석, 법치국가연합 89석, 강경 시아파인 알사드르 정파가 주축인 이라크국민연맹이 70석, 전통적 킨메이커인 쿠르드계 정당들이 57석, 반미 강경파 사드르 40명.

이라크 헌법은 총선 다수당이 30일 안에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내각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러나 이라키야의 알라위는 최다의석을 차지하고도 집권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한 처지. 불과 2석 차이로 뒤진 누리 알말리키 현 총리의 법치국가연합은 재집권을 노리며 정치블록 확대에 나섬. 알리 알다바그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27일 "수일 안에 선관위에 수작업 재검표를 요구하기로 했다" 며 선거 결과에 불복할 뜻도 분명히. 이와 함께 당선 무효 조치를 통해 이라키야의 의석 수를 줄여 법치국가연합을 다수당 지위에 올리는 방안도 강구. 선거 전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 집권당인 바트당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400여 명에 대해 총선 출마 금지조치. 총선 출마를 허용했지만 바트당 참여 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는 당선됐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3위 당인 시아파 이라크국민연맹 시아-수니 연맹 신생정당인 이라키야보다 시아파인 법치국가연합에 더 관심. 수니파인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갖은 핍박을 겪은 쿠르드 정파도 이라키야와의 동맹에 적극적이지 않음. 새 내각에 대한 의회 인준이 늦어질 경우, 권력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파 갈등과 폭력사태가 격화될 가능성이 큼. 정당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에 따라 정치지형과 향후 정국이 급변할 수 있음.

■ 한국경제

1.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어떠한가

1) OECD, 한국 재정건전성 양호 평가

(기획재정부, 2010.3.26)

- 3월 22일 OECD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준비」라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OECD 국가 평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8년 78.4%에서 2009년 90.0%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에는 10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는 2009년 국가채무비율이 이미 100%를 상회했고, 일본은 200%에 근접했다. 재정수지 측면에서도 OECD 국가 평균 GDP대비 재정수지적자 비율이 2008년 -3.5%에서 2009년 -8.2%로 증가했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아이슬란드는 재정적자비율이 10%를 상회하여 재정건전성이 매우 악화되었다.

- 반면 한국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측면에서 모두 OECD 국가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적극적 재정 정책에 따라 2008년 26.8%에서 2009년 33.2%로 증가했다. 그러나 OECD 평균 90%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재정수지도 2009년 -1.8%로 OECD 평균 -8.2%보다 낮았다. 이 역시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에 이허 4번째로 낮은 것이다. 특히 2010년에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재정수지가 적자에서 흑자(0.4%)로 전환하여 2010~11년간 노르웨이와 함께 유일한 흑자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가 없어도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나, 미국, 영국, 일본 등 국가는 2012~17년간 매년 GDP 대비 1% 이상 적자를 축소시켜야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2) 한국의 국가채무는 실제 얼마일까?

(오건호, 2010.3.15, 레디앙)

- 한국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국가채무는 2009년 33.2%다. 그러나 IMF의 2001년 지침을 적용하면 국가채무 수치가 어떻게 될까? 이 지침을 적용하더라도 어느 기관까지 국가채무의 대상으로 삼을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생길 것이다. 최근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채무 산정방식의 개편에서 주로 제기되는 쟁점을 살펴보자.

○ 국가채무가 편법 이전된 공기업 부채

- 첫째, 공기업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할 것인가 여부다. IMF의 2001년 지침은 공기업 채무를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기업 채무 역시 정부가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몫이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국가채무를 공기업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재정 8조 원을 부담한다.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재정을 부담한다. 사실상 정부의 재정사업이 공기업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말 기준으로 공기업 채무가 약 177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정부 몫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 하지만 공기업 채무를 국가채무로 포함하기는 어렵다. 우선 공기업 채무에서 공기업 몫과 정부 몫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기준도 공기업 채무를 국가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채무 산정과 별도로 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채무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하나

- 둘째,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을 국가채무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 통화안정증권은 국내 통화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2007년 말 기준으로 150조 원에 달한다. 이는 형식적으로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의 채무이지만 사실상 국가가 최종 책임자인 채무다.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국채를 발행해 공개시장조작(통화안정초지)을 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중앙은행이 대신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은 정부가 중앙은행에 떠넘긴 채무라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이 정부 독립기관이라는 점, △통화안정증권이 현금 흡수를 위해 발행된다는 점, △한국은행의 손익추세가 나쁘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통화안정증권 채무도 공기업 채무와 유사하게 공식 국가채무와 별도로 공공부문 채무로 계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미래세대를 압박하는 공적연금 잠재부채

- 셋째, 미래 연금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이 소진되어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사학연금, 국민연금도 불가피하게 비슷한 길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입자를 기준으로 추계해보면 장래 급여 지출에 부족한 공적연금의 미적립액은 약 600조 원에 달한다.
- 그러나 공적연금은 제도변화에 따라 미적립액 규모가 변화하는 정책적 채무다. 또한 세대간 연대라는 가치에 따라 설계된 공적연금을 채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연금채무 역시 국가채무와 별도로 공공부문 채무로 간주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 옥동석 교수, 한국 국가채무는 688조 원, GDP의 76%

- 한국에서 정부의 국가채무 수치를 가장 체계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안추계를 제시한 학자는 옥동석 교수다. 옥교수는 한국재정학회를 대표해 2008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연구용역 의뢰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국가채무가 688조 원이고 GDP의 76.3%에 달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33.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 옥교수는 정부 발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 공기업의 제외한 준정부기관, 민간투자산업이 안고 있는 채무 등을 모두 합산하여 우선 540조 원의 국가채무를 산출했다. 여기에 통화안정증권 채무와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법률에 의해 정부가 보증하는 공기업의 채무를 포함하되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무 총액의 절반만을 국가채무에 합산했다. 이 규모가 148조 원이기 때문에 총 국가채무는 688조 원이 된다.

○ 국가채무, 정부부채, 공공부채로 구분해 관리해야

- 필자는 공공기관이 지니는 채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틀로 계산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국제비교를 위해서 우선 IMF의 2001년 기준에 따른 채무를 산정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최종 책임자로 관리해야 하는 채무를 따로 모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2012년부터 한국도 국가채무 계산에 발생주의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용어도 ‘채무’ (Debt)보다는 ‘부채’ (Liability)가 적절하다. 채무는 현금주의의 입장에서 현재 확정된 빚을 가리킨다. 반면 부채는 실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미래 몫 모두를 지칭한다.
- 이러한 논의에 바탕을 두고 여러 채무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공식 채무인 ‘국가채무’. 둘째, 국제기준에 따라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추계 방식도 발생주의를 적용한 ‘정부부채’. 셋째,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 연금부채 등 잠재적인 정부 책임 몫까지 모두 포괄한 ‘공공부채’.

○ 한국정부 부채, 2007년 GDP의 60%로 G20 평균과 비슷

- 한국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는 2007년 299조 원(GDP의 33.2%)이고, 2009년에는 365조 원(GDP의 35.3%)이다. 이는 1986년 IMF의 지침에 따라 작성된 수치다. 이에 따를 경우 2013년에도 국가채무가 30% 중반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 그러나 IMF의 2001년 지침에 따른 ‘정부부채’는 보수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약 540조 원으로 추정된다(GDP의 약 60%). 이는 옥교수가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인정하되 통화안정증권과 공기업 부채는 완전히 제외한 금액이다.
- 마지막으로 ‘공공부채’는 2007년 기준으로 통화안정증권 150조 원, 공기업 부채 146조 원, 연금부채 600조 원 등 약 1,400조 원(GDP의 약 150%)으로 추정된다. 즉, 정부부채와 공공부채의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365조 원보다 200~1,000조 원 많다.
- 결국 한국 정부부채는 IMF의 2001년 국제기준에 따를 경우 GDP의 60% 규모로, 2007년 IMF가 발표한 G20 국가 평균 62%와 동일한 수준이다. 2009년 G20 국가의 평균 정부부채는 GDP의 75.1%로 증가했지만, 한국 역시 상당히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 한국에서 국가채무가 더욱 심각한 이유

- 그러나 동일한 국가채무 수치라도 선진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훨씬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국가신인도가 낮고 무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작년 G20 국가의 국가

채무는 GDP의 75.1%지만 선진국 집단과 신흥국 집단 간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선진국 평균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98.9%지만 신흥국의 평균은 38.9%다. 한편 최근에 자본시장연구원이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국가집단별 적정 국가채무 비중을 추정했는데,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적정채무 비율이 35.2%다. 반면 미국, 캐나다 등 내수가 탄탄한 선진국의 적정채무 비율은 56.2%다.

- 둘째, 국가채무의 성격이 악화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성격별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국민이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빚이고, 금융성 채무는 외환, 융자금 등 정부가 자체상환재원을 보유한 채무다. 국가채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상은 순부채인 적자성 채무다. 1997년 한국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20.1%였다. 그런데 2003년에 이 비중이 36.2%로 늘어났고, 2010년에는 48.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2013년에는 52.1%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 셋째,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채무를 공기업에게 떠넘기는 그림자 채무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넷째,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2000~09년 기간에 국가채무의 규모는 17.2%p 상승했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다섯째, 국가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한국정부의 재정규모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작다. 2009년 국가재정 규모를 보면 OECD 국가 평균은 GDP 대비 45%, 유로국가 평균은 51%이지만 한국은 35%에 불과하다. 국가재정 규모가 작은 만큼 국가채무가 정부에 주는 압박은 더 크다. 여섯째, 앞으로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의 공공자산인 공기업들을 팔아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길은 아니다.

○ 국가채무 문제, 계급정치의 장 안에 들어오다

- 한국도 국가채무에 따른 재정위기에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첫째,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빌미로 '지출 통제'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복지재정 지출 증가율을 평균 4.8%로 정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복지지출은 물가상승률 2.6%, 자연증가율 4%를 합산해 6.6%가 되기 때문에 이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많은 복지사업이 축소된다. 따라서 진보운동은 4대강사업, 국방예산 등 반사회적인 예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4대강사업이 환경을 파괴할뿐만 아니라 재정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 둘째, 진보운동의 정부의 지출통제 프레임에 맞서 세입확대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채무 문제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국가재정을 키우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매년 GDP의 11%, 약 110조 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당장 매년 24조 원의 세입 결손을 야기하는 부자감세를 철회시키고, 나아가 사회복지세 신설 등을 통해 공공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 한국에서도 국가채무 문제가 이미 계급정치의 장 안에 들어왔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약평

- 국가채무, 정부부채에 관련해서는 오건호 씨의 추계가 타당한 듯하다. 공공부채를 광범위하게 추산한 것에 대해서는 그의 주장 외에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판단이 애매하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선전한 OECD 보고서는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국가채무 규모를 계산했다.
- 국가채무 문제를 운동진영의 주요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오건호 씨의 주장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까? 그의 분석 중에 특히 국가별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국가채무 규모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 G20 투쟁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호소할 때 한국 국가채무의 문제가 심각함을 이야기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공공부문에 대한 쥐어짜기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을 폭로할 수 있어야 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그리스와 유사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공부문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는 점은 유사하다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세

1. 천안함 사고

1) "북 민경련 '침몰사고 복연관?... 어이없다" 2010.03.31

- 南 경협길 다 막아 어렵다.. 외화교환 허용 확인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공식창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천안함 침몰과 북한과의 연관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31일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 "<조선일보> 대북전쟁 준비독려? 비상한 결단 준비" 2010/03/31 프레스안

연일 '북한 공격설'...<조선> '연관성 찾기 힘들다'면서도 "북 잠수정 움직임" 강조

2. 지자체선거

1) 경기지사 단일화 미궁..... 심 "토론회먼저" . 김-유 "곤란"

- 유시민국민참여당경기도지사예비후보가지난 26일 경기도지사 '단일화 톨' 을 시민단체에 "백지위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미궁 속이다. 민주당은 야4당 연대 결렬 이후 단일화 논의가 중지된 상태고,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아직은 판을 키울 때" 라는 입장이다.

2) 5+4 협상체계, "민주당 태도가 관건" "(2010/03/31) - 국민참여당, 경기지사 문체 시민사회 위임..."시간 없어 압축적 논의진행"

- 야권 선거연합 협상 재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관건, 이목희 전 의원은 협상대표직 고사, 합의문 거부 이어 또 문체

3. 단신

1) 삼성반도체 백혈병 박지연씨 사망, 삼성반도체 여전히 산재 거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던 중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이던 박지연(여.24)씨가 31일 오전 끝내 사망했다. 삼성반도체 공장은 특히 백혈병 등 암 발병자가 급증해 '산업재해' 의혹을 받아왔지만, 삼성측은 이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그러나 2009년 12월까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확인된 백혈병, 림프종 등 조혈계 암 발병자가 사망자를 포함해 무려 22명에 이르는 등 반도체공장과 암 발병과의 연계관계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2) 무상급식 예산, 또다시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 농어촌 차별급식 계획 확정... '식물교육감 노려

한나라당이 점령한 경기도의회(의장 진중설)가 30일 또 다시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사업은 김상곤 교육감의 남은 임기 내에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 노동

1. 총연맹

1) 민주노총 6.2지방선거 및 교육자치 선거 대응

① 목표와 대응기조

- 민주노총은 대중투쟁에 기반한 대대적인 계급투표 조직으로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과 '진보정치의 승리' 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민주노총은 4월 말 '총파업 및 총력투쟁' , 5.1절 반MB연대총궐기, 5월 반MB 국민행동의 달 ' 등 반MB 반한나라당

대중투쟁전선을 힘있게 구축함으로써 범국민적 반MB연대투쟁을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킨다.

- 민주노총은 정세 요구인 반이명박 연대를 '실질적 연대', '승리하는 연대' 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함으로써 범국민적 여망인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을 실현한다.
- 민주노총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조합원과 진보진영의 요구인 진보정당의 대통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복무함으로써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의 새로운 질적 도약과 명실상부한 국민적 대안정치세력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다.

② 대응계획

-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대중투쟁 전개
; 상반기 집중 집회 및 투쟁 /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 /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국민행동 네트워크(가)' 구성, 운영 (반MB연대 성격)
- 노동자 참정권 보장 운동 전개
; 4~5월 전개되는 민주노총 정책여론사업과 결합하여 '모든 노동자 정치활동 자유' 쟁점화 / 시민사회진영의 '(가칭) 국민주권실현 네트워크' 와 연대 / '우리 사업장 100% 투표하고 출근하기!' 운동 전개
- 대대적인 계급투표 조직 및 현장 정치활동 집중 전개
; 노농학 등 대중조직들의 공동현장교육 / 80만 전조합원 계급투표 홍보물 / 정치실천단 조직 및 선거운동 조직적 결합
- 정책 사업

③ 민주노총 6.2지방선거 선거 방침

민주노총은 6.2 지방선거를 일회적 선거대응을 넘어 조합원과 전체 진보진영의 여망인 진보정당 통합을 실현하고 나아가 큰 틀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복무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10만 선언·서명 4월말까지 완료 등)을 적극 전개하며, 당면 정세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2010년 지방선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전술적 후보방침을 결정한다.

(1) 민주노총은 6.2 지방선거에 한하여, 본후보 등록 전까지 진보정당 통합(추진)을 대중적으로 책임있게 공식화하는 정당의 후보 중 아래 요건에 충족되는 자를 민주노총 후보로 한다.

① 진보정당 통합과 큰 틀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고 실천한다는 '후보서약서'를 쓴 자
 ② 동일선거구 복수출마일 경우, 후보단일화 절차에 따라 선출되는 자
 ※ '민주노총 후보'는 조합원이자 당원인 자 / '민주노총 지지후보'는 당원인 자

(2) 지역본부 및 지역사회, 진보정당 등의 동의(합의)로 선출된 '반MB연대단일후보' 중에서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와 배치되지 않고 민주노총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지지, 연대한다.

④ 교육자치 선거 대응 방침

가) 주요 대응 방향

- 민주노총, 산별연맹 기관지 등 홍보매체에 후보자 홍보
- 지역본부, 산별연맹, 단위사업장 주요 회의·교육시 교육자치선거 교육홍보
- 민주노총 교육자치선거 대응체계 마련
- 현장과 지역주민속에 '후보 이름' 알리기 사업 전개

나) 방침

-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는 가맹·산하조직의 추천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함.

2. 금속

1)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정규 연대 투쟁

- 현대차 전주공자 비정규직 18명 정리해고 반대 투쟁은 당사자인 비정규직 18명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알려져 투쟁 종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안에 대해 원청 및 사내하청 비정규직지회가 연대투쟁을 전개한 정신은 기억할 것.
- 현재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 의장 등에 대한 사측 고소 고발 취하 때까지 정문 앞 천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2)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 금호타이어 지회는 3/27일 확산 파업 전개, 당일 오후 3시 금속 광전지부 주축로 전국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함,
- 매일 교섭을 진행중에 있으며 단협외 복리후생관련 사항 폐지 또는 중단으로 의견일치가 되고 있으며 임금 및 상여금 등에 대한 노사 이견이 있음.
- 3/30일 오전 교섭이 결렬되었으며 한편 3/28 법원은 사측의 정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조의 전면파업 금지 판결함.

3) 금속노조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사수 총력투쟁’ 현장조직화

- 노조는 노동탄압....사수 총력투쟁 세부 일정을 확정함.
- ▲ 4/6 중앙위원회에서 정의행위 결의 및 쟁대위 구성 ▲ 4/7전국 지회장 결의대회 ▲ 4/13 조정신청 ▲ 4/13~14 1차 확대간부 출근 선전전 ▲ 4/16 노동기본권 사수와 임단투 승리를 위한 권력별 조합원 결의대회 ▲ 4/25~21 2차 확대간부 출근 선전전 ▲ 4/21~23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정의행위 찬반투표 ▲4/28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예정>

4) 연행 및 구속

- 지난 16일 발레오 지회장 연행에 이어 26일 금속노조 경주지부 한효섭 지부장과 신시연 수석부지부장이 연행되었음. 또한 창원 대림자동차 옥상 점거 파업으로 인해 이경수 지회장이 노사합의에 불구함에도 구속되었음. 함께 조사받은 조합원들은 모두 석방.

3. 공공

1) 국민연금노조 단협 해지

- 지난해 한국 중부·서부 등 5개 발전회사와 한국가스공사, 코레일 등 공공기관들이 잇달아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그 결과 운수노조 철도본부가 파업투쟁을 벌였고,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발전노조 등도 파업을 벌였음.
- 올해는 국민연금공단이 단체협약 해지. 15일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에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것.
- 노조는 새 이사장이 잠정합의안을 번복한 후에도 일체의 정의행위를 중단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진정성 있게 대화할 것을 요구. 그러나 연금공단은 이에 아랑곳없이 연봉제 도입 등 개악안 논의를 요구하며 노사간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함.
- 국민연금공단은 여기에다 ‘노사관계 상황 참고자료’ 라는 문건에서 단협해지가 경직적·대립적 노사관계 해소에 기여하고, 공단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기대효과’ 가 있다는 억지논리를 펴고있음.

4. 철도/화물/건설

1) 철도노조 정계 현황

코레일 철도파업 중징계 내용

(단위: 명)

해고 처분	파면	30	195
	해임	165	
정직 처분			599
감봉 처분	1개월	5508	9799
	2개월	4224	
	3개월	67	
견책 처분			970

2) 전지협(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소속 4개 노조 탈퇴

-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소속 4개 노조 대표자들은 3월 19일 자로 전지협을 탈퇴함. 탈퇴를 결정한 4개 노조는 서울도시철도, 대전, 광주, 인천지하철노조.
- 도시철도노조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지협은 상임의장인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과 회원조합과의 동의없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찬성’ 등 언론 홍보 및 회원조합에 대한 폄훼 행위 등으로 소속 노조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고 탈퇴배경을 설명. 이후 궤도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함.

3) 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동양광주분회 크레인 고공농성

- 지난 22일 자정 12시 경기도 광교신도시 경남기업 아너스빌 공사현장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건설기계지부 동양광주분회 신동식 분회장 외 조합원 1인이 60미터 상공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목숨을 건 무기한 고공농성을 시작.
- 동양광주분회 56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7월 31일자로 고용계약이 만료 됐지만, 자동갱신 계약 조항에 의해 2010년 7월 까지 계약이 자동연장. 하지만 동양사측은 고용계약이 연장 되지 4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운반비(임금) 25% 삭감/ 조출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 폐지/ GPS 장착’ 등을 강요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1월 30일자로 전원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을 일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벌이고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11월부터는 동양광주 물량을 다른 회사로 빼돌려 일거리를 줄이더니 급기야 지난 12월 1일부터 외부에서 ‘용차’를 불러들여 일을 시키고 있는 상황임.

4) 화물연대본부 상반기 투쟁 요구

-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표준운임제 쟁취와 노동기본권 쟁취, 운송료 인상과 화물운송제도개선 등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상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

5. 교사/공무원

1) 공무원 노조 탄압

- 행안부는 전공노의 출범식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2010년 대국민선언을 불법으로 매도, 참여 조합원과 지도부에 대한 중징계를 한다고 함.
-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면서 노조 홈페이지를 공무원노조 명의로 운영할 경우 사무실에서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기관 내·외부망과의 연계를 차단함은 물론 △출범식 참가 간부 등 조합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 △공무원노조 명의로 현수막, 벽보 등 게시 금지 △선전 유인물 배포나 피케팅 해위 금지 △노조 사무실 현판 제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토록 한 바 있음
- 이후 행안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화 하며 방침에 따라 지난 금요일부터 홈페이지 차단을 하고 있다고 함.
-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태도는 단결권-교섭권-쟁의권이라는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반민주적인 헌법 유린이며 이것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스스로 국격을 떨어트리는 자해행위라고 비판.

2) 전교조가 제출한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법원이 전교조가 낸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 수집과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 을 기각함에

따라 전교조 실명이 담긴 학교별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밝힘.

- 자료를 건네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늦어도 4월 20일까지 법적 검토를 거쳐 인터넷에 전교조 교사의 이름, 소속 학교, 과목을 학부모들이 알기 쉽게 공개할 방침” 이라고 말함.
-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을 법원에 다시 제출할 것” 이라며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겠다” 고 밝힘.

6. 기타

1)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파업안 가결

-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방송 독립'을 기치로 내건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본부장 심석태)가 파업안을 가결.
- SBS본부는 지난 22일부터 29일(부재자투표 포함)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재직 조합원 1068명 가운데 1029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96.4%)해 찬성을 90.9%(찬성 935표, 반대 88표, 무효 6표)로 파업안을 가결했음. SBS본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 등을 확정할 방침.
- SBS노조의 창사 이래 첫 파업결의는 2009년도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으로 SBS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콘텐츠운용위원회 설치 △본부장·실장·총괄CP에 대한 중간평가제 도입 등 단체협약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

2) 대법원,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 2010. 3. 25. 대법원 특별 2부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사내하청노조의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하여 하청업체의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장에서 배제(해고)한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이고 아울러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체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체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체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게 해당한다 ‘고 하면서,’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지배 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체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인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체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게 해당한다 ‘고 판단.
- 이에 따라 원청사업주인 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나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과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당시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노조간부들과 공개된 조합원들이 속해 있던 하청업체들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하청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국가고용전략회의

1. 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 1차 : 1월 21일(이후 매월 점검 회의)
- 고용상황 점검, 고용 창출을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 논의

* 참석대상(총46명)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노동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KDI원장 등 전문가, 일자리 증개기관장 등

- 단기 대응으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추진, 구조적 개선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함.

○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 금년중 취업자를 25만명 이상 증가시켜 고용률 증가, 실업률도 3%로 감소시키고자 함.
- 기본 시스템 구축 : 취업애로계층의 구직 DB,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DB 확충.
- 내년 상반기까지 세제·재정상 인센티브 제공 : ▲취업 장려수당(취업애로계층), ▲전문 인턴제(고졸이하 미취업자), ▲고용투자세액 공제제도(기업 -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세액공제로 고용유발), ▲지자체 경상경비·행사비 등 5%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창출, ▲11월 11일 ‘고용의 날’ 로 지정 - 매년 고용창출 100대 기업 선정, 공표

○ 구조적 고용창출 대책

- 매년 고용률을 0.1%p 이상 제고함으로써 2015년에 위기 이전 고용수준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이내 고용률 60%를 달성하도록 노력
- 고용창출 측면이 고려되는 산업정책과 세계 개편,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U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여 세제 지원
-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 민간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체계 재검토로 보육서비스 개선, 간병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병 제도화
- 경쟁력 없는 대학구조조정 가속화 : 재정지원에서 취업률 반영
- 고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금·고용 유연화 : 노동운동이 ‘일자리 창출’ 을 주요 목표로 이루어질수 있는 여건 조성,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유연화가 이루어지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 고용지원서비스 위탁단가 현실화, 성과와 위탁규모 연계 : 통합고용 정보망 구축, 개인별 이력관리 체계화함으로써 생애주기에 걸친 고용서비스 제공

○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관련

- 1년간 한시적 운영, 매월 1회 이상 개최
- 총리실 국무차장, 재정부 차관, 교과부 차관 담당 : ‘고용·사회안전망 TF’ , ‘실물경제 TF’ , ‘교육·인력 양성 TF’ 를 구성하여, ‘노동시장 효율화’ , ‘서비스산업 선진화’ , ‘교육제도 개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
- 추진사항 매월 점검,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 조속히 금년 중 제도화

2.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 _ 핵심 :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 2월 18일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편하게 일할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발표.

- ▲ (개념)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유형) 선택적 근무제(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단시간근로제, 장기휴가제 등

○ 추진배경

- 선진국은 단시간근로 증가 추세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수가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
-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유연근무제가 필요하나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시행 안되고 있음
-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하여 개인의 생애경로에 따른 노동시간 재배치가 필요함

○ 내용

-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 발굴 → 민간확산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부 주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TF구성, 시범 운영. 금년 말 전기관 확산
 - : 사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단시간 상용상담원 (1일 5시간 근무)
 - : 사례) LH공사 60세 이상 고령자 단시간 채용 (주5일, 1일 4시간, 월 50만원 내외)
- 민간부문에 일가정양립형 단시간 근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 단시간근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의료·보건 등의 분야에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지원 할 계획임

○ 중점 추진과제

- 단시간 근무 형태 : 직무공유제, 전일제의 시간제 전환 지원, 시간제근무인력 충원 확대, 정원관리방식

<시범 운영기관> 행안부(근무형태 선진화), 교과부(교사 적용), 노동부(일자리 창출), 여성부(여성 경제활동 촉진), 복지부(출산장려), 지자체(부산시, 경상남도, 서울 동대문구 등)

- 신규고용 시 적합직무에 단시간근로자 채용 확대
 - : 업무분할형(민원상대업무, 보육시설 - 시간연장 보육시설 등), 휴일·야간 전담형(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등), 집중시간형(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등을 채용하여 피크타임 배치)
- 공무원 재택근무, 탄력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 성과중심 조직문화 촉진

○ 약평 : 정부의 유연근무제 도입은 일가정 양립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 대책에 가까우며, 이는 불안정한 일자리 늘리기와 다름 아님. 또 피크타임, 업무집중화 등으로 최대한 노동비용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3.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

- 3월 4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대통령주재로 246개 자치단체장, 관계부처장관 및 민간 전문가 참여
-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역량을 총집결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자 하여 개최됨
- 내용
 - 현 고용상황 평가 및 향후 고용대책 방안,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방안,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 지자체 우수사례 4건
 - 희망근로 종료에 따른 총력 흡수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 5월까지 3천억 투자, 3만개 이상 일자리. 자전거 수리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 길 등
 - 나머지 내용은 특이 사항 없음. 정보통신망 구축, 찾아가는 구인업체, 기업지원 같은 것. 공공기관의 경우 유사 업무 부서 통합, 생산적 사업 재설계.

○ 약평 :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지역일자리 조성 논의가 핵심이었음. 그런데 지역일자리 조성의 전제를 보면, 경제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자치단체부터 '공무원 급여반납',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 전개임. 결국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나누기란 공무원 일자리 쪼개기와 다름 아니며, 창출되는 일자리 또한 낮은 질의 열악할 일자리 임. 한편 일자리 창출 대상이 되는 것은 취약계층으로, 이명박의 '복지의 기본은 일자리' 기초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결국 일자리와 복지를 한꺼번에 때우려고 하는 이명박의 정책은 일자리, 복지 부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

■ 여성

특이사항 없음. <끝>